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07. 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07. 2

여 인 곤 (동북아연구실장)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장)
조 한 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머리말	1
II. 「2·13 합의」이행: 북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북·미간 줄다리기	3
III. 북한정세	5
1. 김정일체제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전개	5
2. 국방우선 정책으로부터 경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	6
3. 대남 경협을 적극화	7
4. 대외관계	8
IV. 남북관계	14
1. 당국대화 재개 및 정상회담 가능성	14
2. 다양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15
3. 사회문화교류 확대	17
4.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인권개선 노력	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

1. 머리말

통일연구원은 1991년 창설 이후 매년 연말에 동북아 역내와 북한 및 남북관계에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고찰·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이듬해 정세를 전망·예측하는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작년 말에도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을 발간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위기로 인한 북·미 간의 대치양상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2005년 11월 개최된 제5차 1단계 6회담까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미·일과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하여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22일 개최된 제5차 2단계 6자회담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상황 전개들을 고려하면서 작성·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북·미 양자회담 불가,’ ‘대가 없는 무조건 핵폐기’ 등 대북 강경정책을 견지해 오던 부시 행정부가 양자회담을 수용하는 등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 변화는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 이라크 내전 격화, 이란 핵문제 심화, 2008년 대선 등의 문제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일단 진정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각한 에너지·식량·외화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도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 및 제재 해제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미 양측의 이해일치로 금년 1월 16~18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부상간 베를린 회담이 성사되었고, 이는 제5차 3단계 6자회담으로 이어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북핵 합의」)라는 큰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번의 「2·13 북핵 합의」는 핵폐기를 위한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연구원은 작년 말에 발간된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보고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보완하여 본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북한과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I. 「2·13 합의」이행: 북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북·미간 줄다리기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 즉 다자방식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양태를 보여 왔으나 내용적으로는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양자적 ‘힘’겨루기로 특징된다. 전자는 북한의 완전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 다양한 압력수단을 구사하는 대북 압박전술을 구사해 온 반면, 후자는 이에 맞선 단계적인 벼랑끝 전술(핵보유선언→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강행)로 응수해 왔다.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힘’겨루기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절정을 맞은 이후 양측은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였다.

6자회담 재개는 ‘위기 조성 이후 대화’로 전반적인 대북 제재국면 전환을 피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상황에서 핵실험 이후 북한이 발 빠르게 대화 제스처로 응대함으로써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회의에서 북한핵시설의 폐쇄→불능화→폐기라는 기본적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보상과 보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 활동을 통한 핵확산을 동결시키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한 반면,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제재 및 압력 완화, 경제적 지원 확보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 핵문제는 각 단계별 북한의 이행여부 또는 정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북한은 2·13 베이징 합의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 영변과 태천 5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및 감시 작업 허용 관련 구체적 이행 사항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유 5만 톤 상당의 대북지원 약속이 이행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5개 분야 실무그룹(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활동이 개시될 것이다. 향후 30일간의 이행사항에 있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60일 이후 핵시설 불능화 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경우 문제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첫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 둘째,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여부 등)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국면에 가야 할 것인가, 셋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북한의 2·13 합의 이행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60일 이후 그들의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이행사항을 완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미간의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간 이견이 심하게 노정되는 경우, 북한은 또 다시 돌출적인 행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은 대화와 합의 이행을 수행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일정한 긴장 조성과 함께 이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반미 모험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다.

Ⅲ. 북한정세

1. 김정일체제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전개

금년에도 북한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이념·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지속될 것이다. 2007년은 김정일 출생 65돌(2.16), 김일성 출생 95돌(4.15), 김정일 공화국원수 추대 15돌(4.20), 인민군 창건 75돌(4.25), 김일성 ‘5·25 교시’ 40돌, 공청 80돌(8.2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10돌(10.8) 등 다양한 ‘꺾어지는 해’이다.

북한은 이를 맞아 김정일 권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충성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일 개인의 위대성 부각 작업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 특히 ‘5·25 교시’가 강조된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년에는 김정일 노선 즉, 경제강국 건설에 소극적인 관료들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중앙당검열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7년 5월 25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도 박금철·이효순·김도만 등 이른바 ‘갑산파’가 숙청되었고, 이것은 김정일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결정적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안정 정책을 지속하기 위하여 추진될 사회통제와 사상교양 사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북한은 2006년의 수해 후유증,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한 경제난 가중 등 상황악화 속에서 사회질서의 이완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통제와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상사업에서의 형식주의 타파, 긍정적 모범따라 배우기, 문화예술 작품의 정치적 동원 등의 전통적인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를 소재로 다양한 정치집회, 군중시위 등의 정치적 동원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꺾어진 해로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작업 강화를 위한 선전선동활동에 적극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미국과의 대결 등을 소재로 한 ‘선군사상’의 이론적 개발 작업 등을 통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에 상응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론화·사상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방우선 정책으로부터 경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

북한은 2007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을 우선해 오던 정책에서 다소간 벗어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무기 증강을 위한 국가자원 분배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불능화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호전되었다. 북한의 합의이행 수준과 속도에 달려있지만 국제적 제재와 압력은 완화될 것이다. 대외환경의 개선으로 북한은 식량난 심화,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동사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나 현지지도를 통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내부 자본이 고갈되었고 수십 년간 지속된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상태에서 정상조업을 위한 원자재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

하기 때문이다. 비록 6자회담을 통해 대외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이를 통한 외부자본의 유입과 같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북한경제에 전달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북한경제 희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내외환경이 필수적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대외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경제성장의 속도가 다시 둔화되고 있다. 7·1조치 당시 북한은 이를 3년 정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7·1조치는 일부 상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소 성과를 보였을 뿐, 국가경제의 성장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에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북한이 2002년에 실시한 7·1조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남 경제협력의 적극화

북한은 핵문제 해결 과정상 전개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유엔 제재 및 금융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대남 경제협력에는 적극 임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운동을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리념에 맞게 발전공고화 해나가야 함”을 언급해 온 것은 북한이 대남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게 될 것이다. 3월을 전후하여 남북장관급회담에 나와, 이산가족상봉을 대가로 곡물 및 비료지원을 요구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 대상,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먹는 문제(식량), 경공업 혁명(원자재), 전력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강화 등은 남측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산기술과 관련된 대남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술획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등 대남 경험 강화에 따라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강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노력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며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주요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대외관계

가. 북·중 갈등관계 해소와 경험 회복

북한의 핵심협으로 야기되었던 북·중간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축소되었던 경제협력이 회복될 전망이다. 북·중 양국은 6자회담이 지속되는 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들을 실행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실무그룹 내에서 북·미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국력 신장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나 초기조치 이행 직후 개최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 인권문제나 대만 등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북한도 인권문제가 논의사안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와 대일 관계정상화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와 북·일간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기존 대북 영향력의 축소 등 자국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북한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6년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같은 수준인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북한에 하였는데, 원유는 약 50만 톤, 인도적 차원의 식량은 약 40만 톤이다. 북한은 핵타결로 인한 추가지원을 중국에 요청할 것이나, 중국은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를 자국 분담 몫(중유 2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며 동맹국인 중국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중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핵 실험이후 잠정 중단하였던 대북 금융거래와 투자 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고 대중 경제의존도를 확대하여 대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북 교역(2005년 16억 달러), 투자, 지원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예상된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 상황으로 보아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동북 3성, 특히 지린성과 창바이 「조선족자치현」에 설립된 「중·조무역회사」를 통한 변경무역이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조무역회사」는 중국과 북한간 친선 증진과 변경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2006년 2월 설립, 현재 북한의 37개 무역회사와 연계, 투자유치와 무역교류, 상담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 지역 에너지 자원의 대중국 반출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중국 단둥을 경유한 북한산 무연탄 반출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이후에도 크게 증가, 동기간 동안 전체의 60%이상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누계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44개 항목에 합의액 21,935만 달러, 실제 투자액 12,722만 달러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국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는 거의 중단되었다.

나. 북·러간 경제·에너지·철도 협력확대

북한은 초기조치 실행을 위해 전통적인 선린국가이며 안보후전국인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의 대미와 대일 관계정상화를 지지할 것이다. 북·미와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는 기존 대북 영향력의 축소 등 자국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북한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큰 이해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는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초기조치 이행 이후에는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 참가조건으로 대러 채무(80억 달러)의 80%를 탕감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중유 2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도 채무 탕감(약 6,000만 달러)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 경제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이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무역통인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의 취임과 북핵문제의 타결로 향후 북·러 관계는 경제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던 「북·러 경제무역협력회의」가 금년 3월에 개최되어 양국 간 각종 경제협력 방안이 협의되고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가 최종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사할린주 간에 건설·목재 가공·원유·가스 분야 경협도 확대될 전망이다. 나진-하산 40km 구간 철도현대화 사업이 조만간 완료되고, 남북한·러 3국간 TSR-TKR 철도 연결 회담도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러 양국이 2001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러시아 잉여전력의 북한 공급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 사이에 370km 길이의 초고압 500kv 직류 송전선을 건설(약 2억 달러 공사비와 3년의 공사기간 예상)하여 30~50만kw 전력을 공급하고, 북한은 광물자원, 광산 개발권 보장 등으로 상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약속된 200만kw 전력의 일부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그 비용을 남한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북핵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베를린 합의에 따라서 마카오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합법적인 북한 자금 1,100만 달러에 대한 동결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힐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3~4월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방문을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이 1980년대 중반이후 테러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핵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과정의 시작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의 진전과 관련된 논의가 핵심적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되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 정도를 주시·확인하면서 유엔안보리와 자국의 대북 제재 해제 수준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협상에는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북·미 수교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종료로 간주하여 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대북 수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경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이나 초기조치 이행 직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에 참여는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보다는 양자간 안보동맹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에서 미국이 중유 2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예상된다. 미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 지속되는 경우, 미국의 대북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 문제와 관련, 포럼의 구성과 개최시기·협상의제 등을 둘러싼 북·미간 논쟁이 예상된다.

라. 북·일 관계정상화 난망

북핵문제가 일단 타결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 정부에 북한 선박의 입항과 수입 전면금지, 일본내 대북 계좌 봉쇄, 사치품 24종 수출금지 등

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대일 수교시 50~100억 달러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 관계정상화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은 2002년 9월 17일 김정일-고이즈미 간 채택된 '평양 공동선언'과 2004년 5월 22일 도출된 제2차 김정일-고이즈미 간 평양 회담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망 또는 행방 불명된 납치일본인 10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문제,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진위문제, 대북 제재 해제문제, 과거청산·배상 문제, 미사일 발사동결 문제, 재일 조총련계 교포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의 북·일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냉전종식 이후부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다양한 역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과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는 다자간 안보대화과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담과 초기조치 이행 직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에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현재 일본은 가장 중시하고 있는 납치문제 해결이후 지원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그룹에서 납치문제가 북·일 간에 타협될 가능성이 커 일본도 결국 대북 지원분담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동안 4자회담 등에서 제외되었던 일본은 이에 적극 참여하려 할 것이다.

IV. 남북관계

1. 당국대화 재개 및 정상회담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UN의 대북제재 결의가 상징하듯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자주성을 상실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추동력이 상실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남한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2·13 북핵 합의는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현실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15 개성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2·13 북핵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13 북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과거핵 및 완전폐기 등의 난제가 남아 있으나 중·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유도하려 할 것이며, 남한의 경우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되돌리기 어려운 확고한 모멘텀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당분간 남북 당국대화에 있어서 청신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안정적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남북장관급회담은 2006년 하반기 중단된 대북 쌀·비료지원의 재개를 비롯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경공업 원자재제공 및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들의 성사를 위한 안정적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상시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군사분야에 있어 남북장관급회담의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은 실리추구를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남북군사장관급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특사교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 모두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한 실리추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 회복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상징적 계기가 필요한 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 및 남한의 대선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장관급회담의 재개, 특사교환, 남북정상회담의 수순이 조심스럽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장관급회담 등 당국회담의 활성화, 6·15 시점을 전후한 특사교환, 8·15 시기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울 경우, 남북총리회담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양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남북경협은 지체와 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진전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속도 조절 요구 등이 완화되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진정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회생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도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1995년 이래 다시 ‘민족중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민족중시’는 이전의 ‘민족공조’보다 강화된 표현으로 남북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를 통한 개성공단 관련 문제 및 기타 경협 관련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접촉과 당국 차원의 실무협의회, 실무접촉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될 것이다. 정부는 3대경협사업(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지연되었던 1차 본단지 분양이 재개되고 단지내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금강산사업은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의 활력을 다시 찾을 것이다.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은 시험운행과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한 자재와 장비의 지원이 재개될 것이다. 즉,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가 새로운 경협사업(신경협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특히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이 구체화되어 시범사업이 성사될 것이다. 한편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사업도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어느 정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교역에서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모두 증가세가 예상된다. 대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3. 사회문화교류 확대

북핵실험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제약되었던 국내 대북 NGO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사회문화교류 확대추이가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직접적 대미 비난 논조를 약화시킬 것이지만, ‘민족공조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남한 내에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대북 지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규모의 상징적 민족공동행사를 제의함으로써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남북한·해외동포 3자 연대방식의 민족공동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남한의 대선과정에서 여론의 보수화가 초래될 경우, 유보된 북한의 과거행 문제 및 6자회담 후속조치 등의 이행에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북 정서의 증대 및 대북정책 추진력의 약화 가능성도 있다.

4.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인권개선 노력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된 당국 간 지원은 2·13 북핵 합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국경통제 강화로 인해 개인차원의 식량거래 등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장마당에서 식량가격은 북한의 식량 생산분이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경거래의 축소 및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축소 등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특정계층의 식량접근은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남한지원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대북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는 비료 시비 적기 등을 고려할 때 2월 말에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간 지원 유보를 빌미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건설, 납북자 문제 협의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대북지원 재개와 연계하여 동시에 회복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기존의 금강산 순차상봉, 화상상봉 등의 방식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사업도 당국 간 지원과 함께 재개될 것이다. 또한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미 협의하기로 합의된 납북자문제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향장기수 추가송환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당국 간의 비료 및 쌀 지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것이며, 지원의 규모는 북한의 상호 대응조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에 대한 현금전용 의혹 논란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사업은 외부감사 및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확보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핵 타결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유로운 접근허용 등의 요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상당부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식량난으로 인한 어린이 및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대북 지원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도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영아살해·강제송환 이후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중국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후반과 같은 대규모 탈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원칙 등을 준용하는 기존의 원칙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탈북자들의 남한 등 제3국으로의 이동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중국 및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을 입국시키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개인 및 관련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국내입국 규모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 타결과 함께 외부지원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다소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정보유입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탈북을 희망하는 주민의 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등 제3국 체류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며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국내입국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이미 공개된 태국 및 베트남 등 입국경로가 현지국의 부담으로 통제될 경우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탈북자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미국이 2008년 회계연도에 탈북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난민 보호예산 중 동남아 지역에 2,0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는 점에서 동남아 국가 등 제3국에서의 탈북자 보호 및 미국입국 허용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형법 개정 등 국내 입법을 통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유엔인권레짐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행태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의회 결의안 등을 토대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양자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인권을 거론하기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북한노동자의 인권 등 노동의 권리, 납치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6자회담에서도 일본은 납치자 문제해결을 꾸준히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및 일본이 국내법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 등에 따른 탈북자 보호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08년 회계연도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배정함에 따라 법치확립, 정보 확대 등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핵합의이후 북한지도자 및 체제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중단할 것이나, 대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보다 구체화 하고 확대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찬성을 계기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적 갈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막연한 정치적 공방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의 방식을 둘러싼 실효성 논의가 보다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헌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북한인권 :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7-02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 팩스 : 901-2543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7년 2월 일
발행일 2007년 2월 일
